



‘박근혜 체제’를 해체시키자! 모든 공범을 처벌하라!

권력을 사유한 자들을 법정에 세우자

민중은 분노하고 있다. 능력 없는 숨은 실세가 국정을 농단해서만도 아니고, 청와대와 정부가 사사로운 이익에 휘둘러서만도 아니다. 국민을 ‘개돼지’라 부르며 호가호위하던 권력의 민낯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의 심연을 후벼파는 고통을 해소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다.

박근혜 대통령과 그 옆에서 권력을 사유화한 자들은 모두 퇴진시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 이의를 달 수 없다. “국정수행 중단은 안 된다” 운운하며 어떻게든 연명하려는 시도는 퇴진을 외치는 민중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을 뿐이다.

그러나 문제는 ‘박근혜 체제’다

그러나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이 해방의 광장에 모인 우리는 잠시 생각해 봐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지탄받은 이들만 물러나면 끝인가? 우리는 존중받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우리의 참담함은 최순실 개인 비리 때 문만은 아니다. 생각해보라. 박근혜를 손가락질 하는 이들 중 대다수는 사실 시종일관 박근혜와 한 몸 아니었던가? 이

들은 권력을 나누기로 의기투합하였고, 박근혜가 무시무시한 공권력으로 우리를 겁박해 굴복시키고 나면, 최순실 따위가 물러들어 수금에 나섰을 뿐이다.

문제는 박근혜 한 사람이 아니라 박근혜를 세워 권력을 함께 누린 자들의 체제, ‘박근혜 체제’다. 우리는 도처에서 이 체제를 뼈저리게 겪은 바 있다. 입 닫고 귀 닫고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거기 있으라.” 이 무시무시한 말이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 우리를 갇아먹고 움푹달작 못하게 만들었다.

지금 박근혜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자들의 정체

바로 1년 전 이 자리에서 박근혜의 지금 모습을 폭로하고 퇴진시켰다면 우리는 백남기 농민을 우리 곁에서 떠나보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목매달고 죽어간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고통을 온 몸에 떠안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차가운 감방 속에 버려두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 권력에 대한 도전”, “빨간 우비” 운운하며, 한 서린 채 누워있는 백남기 농민 시신을 탈취해야 한다던 자들이 갑자기 “박근혜-최순실이 민주주의를 농락하고

있다”고 외친다. 아직도 가슴이 시려 남겨진 사진들에 눈을 주지 못하는 세월호의 부모와 친구들에게 “교통사고에 불과한 일로 국정을 가로막는다”고 손가락질 해대던 자들이 지금 “불통 박근혜는 국정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백혈병으로 고통 받던 황유미에 눈 감고, 구의역 스크린도어에 생을 마감한 열아홉 김 군에 귀 닫으며, 최저임금마저도 아깝다며 청년들의 미래를 차압하던 자들이, 자신도 최순실에게 갈취당한 피해자라며 지금 우리 앞에 서있다. 3대 세습에는 눈 감은 채, 이들이 박근혜 퇴진 마당 맨 첫 줄을 차지하는 바람에, 정작 피눈물 흘려 왔던 민중들은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체제’를 유지하려는 자들

4년 전 그랬듯 그들은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나설 것이다.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선 우리들은 사냥개로 쓰이고 버려질 것이다. 박근혜는 없지만 그들이 만든 ‘박근혜 체제’는 계속 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을 청산하지 못하면 역사는 되풀이된다. 우리에게 ‘박근혜 체제’ 부역자 문제가 남겨져 있다. 한테 몰려와 우

리를 겁박하고 고혈을 빨던 자들이, 우리의 미래를 해결해 주겠다고 나서고 있다. 우리를 권력 장악의 도구로만 여기는 그들은 청산의 대상이지 함께 갈 벗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 부역자들을 청산해야 한다

우리 곁에 어디에나 널려 있는 ‘박근혜 체제’의 그늘을 하나씩 제거해나가야 한다. 나를 굴종시키고 부정부과 불의에 눈 감게 만들고, 입 닫고 말하지 못하게 만든 지배자들을 넘어서야만 한다.

박근혜 퇴진 이후의 길은 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를 쓰다가 버리는 개로 여기는 자들에게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지 보여주어야 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 길을 손과 발을 빌어 대신 갈 수는 없다.

더 이상 4년에 한 번, 5년에 한번 주인들을 뽑는 절차에 동원되는 도구가 되지 말자. 민주주의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직장에도, 학교에도, 군대에도, 가족에도 없는 그 민주를 이제 우리 손으로 찾아 세우고 지켜야 한다.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박근혜 체제의 부역자들을 모조리 감옥으로 보내자. ●

삼성의 주기적 헌정 유린! 최순실-이재용 게이트에 주목하자!

불법 도박에서 가장 큰 범죄자는 그 판을 연 물주다. 국정농단 사건의 가장 큰 물주는 삼성이었다. 작금의 헌정 유린 사태를 해결하려면 당연히 물주부터 처벌해야 한다. 삼성은 최순실을 통해 국민연금을 자신들의 경영권 승계에 이용했고, 또 최순실을 통해 경찰과 노동부가 노조 탄압을 묵인하고 협조하도록 만들었다.

삼성의 주기적 헌정유린

삼성의 헌정유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97년 대선개입, 02년 차떼기, 07년 비자금 특검, 그리고 16년 최순실 게이트까지, 주기적으로 벌어졌다.

“경영권은 승계되어야 하고, 노조는 있을 수 없다.” 이 두 가지는 이병철 회장 때부터 내려오는 삼성그룹의 사훈이자 삼성공화국의 헌법이다.

2007년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삼성 특검도 경영권 승계를 위한 비자금 조성에서 비롯됐었다. 이재용은 금융사기와

내부거래를 통해 그야말로 날로 지분을 인수했다. 횡령과 배임 혐의가 분명했지만, 특검은 황당한 이유를 대며 이견희 회장을 놓아줬었다.

1997년 대선개입 사건은 삼성이 내놓고 헌정을 유린했던 사건이었다. 이학수 삼성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대선에서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정치 공작을 했던 내용이 후에 들쭉날쭉한 사건이다. 02년 대선 때도 삼성은 이회창 후보에게 수백억 원의 정치자금을 트럭에 실어 제공하다 적발됐다.

삼성이 주기적으로 헌정을 짓밟는 이유는 간단하다.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경영권 승계가 쉽지 않고, 노조 건설을 끝까지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삼성과 대한민국 헌법은 공존이 불가능하다.

이재용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라!

이재용 부회장은 스스로 앞으로 나와 최순실-이재용 게이트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검찰과 관계 당국은 삼성을 분명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노조 조합원들의 피해를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 관련 제도를 개혁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 국민연금은 삼성 계열사 상당수의 대주주다.

지금처럼 불법 탈법적 경영권 승계가 계속되고, 삼성이 정부에 로비를 한다면

국민연금은 이재용을 위해 또 스스로 손실을 보려 할 것이다. 삼성에는 여전히 무노조 신화를 깨고 노조를 세워 인간답게 당당하게 일해보고자 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삼성의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된다면 이들 모두가 또 피해자가 될 것이다. 바로 지금 삼성을 처벌해야 삼성을 바꿀 수 있고, 대한민국과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 ●

박근혜 퇴진 운동의 시대사적 과제

한국 경제의 불행, 한국 민주주의의 불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국민에게 가한 충격은 97년 IMF 사태와 비견할 만하다. IMF가 준 충격은 무엇이었나? 한국경제가 외형적 성장을 거듭해 OECD에 가입했지만, 알고보니 빛 좋은 개살구, 빛더미 위에 이룩한 허울이었다는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것을 경고한 집단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정치권력은 오히려 금융권과 기업의 부실대출에 거간꾼 노릇을 했다. IMF 사태는 우리 경제와 사회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냐는 비통함과 자괴감을 남겼다.

20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충격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국의 정치가,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는 한탄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 사태를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한다. 농단이란 높은 언덕을 뜻한다. 즉 공인이 아닌 사인 최순실이, 공인 대통령보다 더 높은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 의혹이 만연한 이유는 한마디로 대통령의 '불통'이다. 대통령이 청와대 구중궁궐 속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지낸다는 사실을 이미 온 국민이 알고 있던 마당에, 바뀌지 않는 행태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시점에 이번 사건이 터졌기 때문이다.

나아가 IMF 사태와 마찬가지로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집단이 없었다. 청와대, 새누리당, 국회, 행정부와 검찰, 심지어 사법부까지 대통령 눈치 보기에 급급했을 뿐이다.

책임성 없는 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는 권력의 '위임'이라는 원리 위에 작동한다. 이는 '인민주권'이라는 원칙에서 볼 때 심대한 결함이 있다. 예를 들면, 광우병 소고기 수입 협상에 국민의 95%가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추진하는 게 '위법'은 아니다. 따라서 대의제 민주주의는 '책임성'이라는 또 다른 원리를 탄생시켰다. 즉 공직자가 결정을 내릴 때 국민의 요구를 심사숙고하고 자신의 행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오늘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떠한가? 기초연금부터 경제민주화까지, 이루 셀 수 없이 많은 공약을 박근혜 정부가 차례차례 파기할 때, 어떤 책임성 있는 자세를 보였는가?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패배했을 때,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책기조를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조금이라도 비쳤던가?

정치적 의사결정과 권력행사가 국민으로부터 유리되어 공직자가 위임된 권력을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때 권력과 정치의 사유화가 발생한다. 이럴 때 최순실 그룹 같은 가신집단이 등장하여, 세도를

누리며 사익을 추구하게 될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 경제와 책임성 없는 정치

그렇지만 오늘날 정치위기는 한국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세계 주요국에서는 기존 중도우파, 중도좌파 정당이 급격히 쇠락하고 새로운 극우정당이나 좌파정당이 동시에 출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샌더스와 트럼프가 동시에 등장해 결국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는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 자본이동의 자유화로 국내자본이 외국으로 빠져나가 실업이 악화되거나, 해외투기자본이 들어와 이익을 거둬가는 반면, 초민족기업은 조세피난처로 돈을 빼돌린다.

반면 외국자본 유치라는 명분으로 노동권 보호는 악화되고 재정건전화라는 근거로 복지삭감이 단행된다. 하지만 '글로벌 스탠다드'를 외치는 중도정부는 국민의 크나큰 고통에 무심하다. 이 모든 게 결국 책임성 없는 정치로 나타난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신자유주의 경제기조가 지속되는 한 책임성 있는 민주주의란 근본적인 불가능성을 안고 있다. 반면 민주주의를 다시 작동시키지 않고서는 신자유주의 경제기조를 바꿀 수 없다. 우리의 박근혜 퇴진운동은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정책의 변혁이라는 이중의 과제를 수행할 것이다. ●

박근혜-최순실-삼성 게이트
특별페이지 소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사회진보연대는 보수언론의 주요 기사, 논설을 매일 논평하는 특별 페이지를 운영합니다. 보수언론의 속내를 파헤치고 박근혜 퇴진 행진이 나아가야 할 바를 함께 모색합니다!

www.pssp.org

사회진보연대 검색